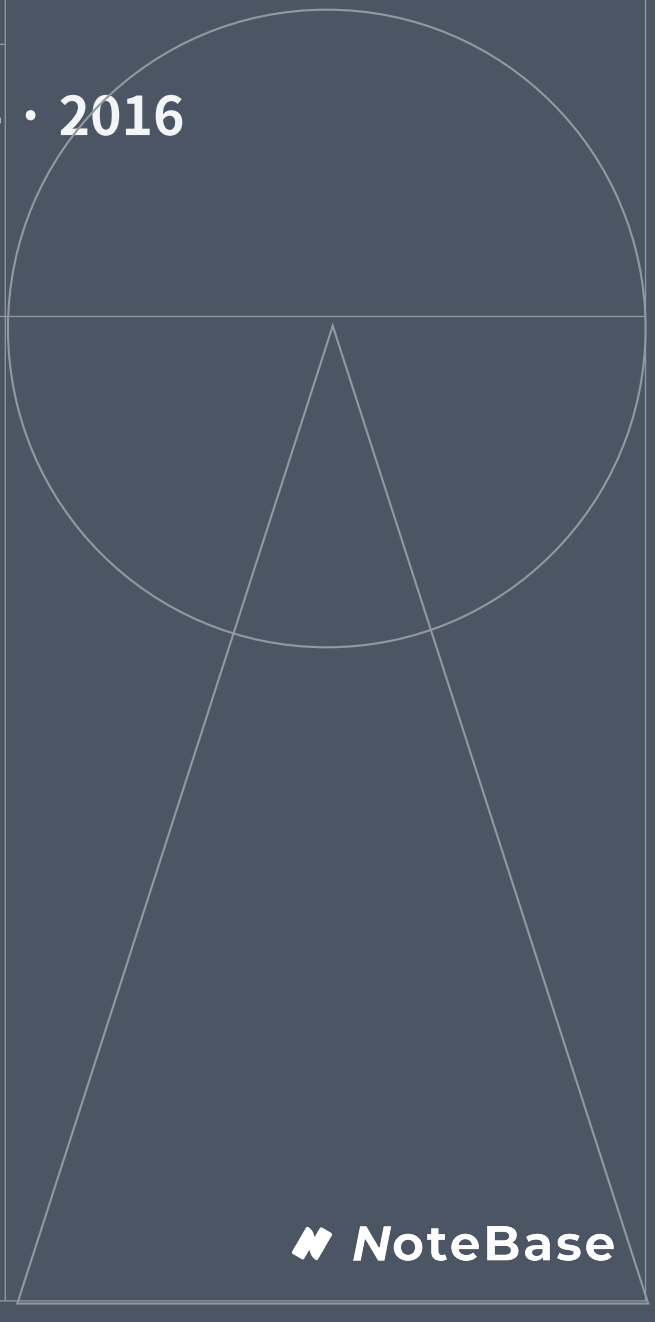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전문직/노무사 · 경제학원론 · 2016



NoteBase

기출OX 해설집

전문직/노무사 · 경제학원론 · 2016

전문직/노무사 · 경제학원론 · 2016

문 101. A 기업은 완전경쟁시장에서, B 기업은 순수독점시장에서 생산활동을 하고 있다. 두 기업의 총수입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두 기업 모두 총수입곡선이 처음에는 상승하다 나중에는 하락한다.

② 두 기업 모두 총수입곡선이 음(-)의 기울기를 갖는 직선이다.

③ A 기업의 총수입곡선은 수평선의 형태이나, B 기업의 총수입곡선은 양(+)의 기울기를 갖는다.

④ A 기업의 총수입곡선은 양(+)의 기울기를 갖는 직선이고, B 기업의 총수입곡선은 처음에는 상승하다 나중에는 하락한다.

⑤ A 기업의 총수입곡선은 처음에는 상승하다 나중에는 하락하고, B 기업의 총수입곡선은 수평선의 형태이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완전경쟁기업과 독점기업이 직면하는 수요곡선의 차이가 총수입곡선의 모양을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완전경쟁기업: 시장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는 가격수용자이다. 가격 P가 일정하므로 총수입은 $TR = PQ$이고, 원점에서 출발하는 양(+)의 기울기 P를 가진 직선이다.
독점기업: 시장수요곡선 전체에 직면하므로 판매량을 늘리려면 가격을 낮춰야 한다. 총수입은 처음에는 증가하지만 한계수입이 0이 되는 지점에서 최대가 되고, 그 이후에는 감소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두 기업 모두 총수입곡선이 처음에는 상승하다 나중에는 하락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올바르게는 A 기업의 총수입곡선은 계속 상승하는 직선이고, B 기업의 총수입곡선은 처음에는 상승하다 나중에는 하락한다.

② X
두 기업 모두 총수입곡선이 음(-)의 기울기를 갖는 직선이라는 부분이 틀렸다. 올바르게는 A 기업의 총수입곡선은 양(+)의 기울기를 갖는 직선이고, B 기업의 총수입곡선은 처음에는 상승하다 나중에는 하락하는 곡선이다.

③ X
A 기업의 총수입곡선이 수평선이라는 부분과 B 기업의 총수입곡선이 계속 양(+)의 기울기를 갖는다는 부분이 틀렸다. 올바르게는 A 기업의 총수입곡선은 양(+)의 기울기를 갖는 직선이고, B 기업의 총수입곡선은 최대점 이전에는 양(+)의 기울기, 최대점 이후에는 음(-)의 기울기를 갖는다.

④ O
A 기업은 가격이 일정하므로 총수입곡선이 양(+)의 기울기를 갖는 직선이다. B 기업은 판매량 증가에 따라 가격을 낮춰야 하므로 총수입이 처음에는 증가하다가 최대점 이후 감소한다.

⑤ X
A 기업과 B 기업의 총수입곡선 형태를 서로 바꾸어 설명한 것이 틀렸다. 올바르게는 A 기업의 총수입곡선은 양(+)의 기울기를 갖는 직선이고, B 기업의 총수입곡선은 처음에는 상승하다 나중에는 하락한다.

오답 포인트

완전경쟁기업의 수요곡선이 수평선이라는 사실을 총수입곡선도 수평선이라는 뜻으로 혼동하기 쉽다. 수평인 것은 가격을 나타내는 기업의 수요곡선이며, 총수입은 일정한 가격에 판매량을 곱하므로 판매량과 함께 직선으로 증가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기업이 직면하는 가격이 일정한지를 확인한다. 가격이 일정하면 $TR = PQ$이므로 총수입곡선은 우상향 직선이다. 판매량을 늘릴 때 가격을 내려야 하면 총수입곡선은 한계수입이 양(+)인 구간에서 상승하고, 0인 지점에서 최대가 되며, 음(-)인 구간에서 하락한다.

암기 포인트

완전경쟁은 가격 일정·총수입 직선, 독점은 가격 하락·총수입 역U자형이다.

NoteBase

문 102. 지니계수 (Gini coefficient)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니계수가 같으면 소득계층별 소득분포가 같음을 의미한다.

② 완전히 평등한 소득분배 상태를 나타내는 45도 대각선과 로렌츠곡선 (Lorenz curve)이 일치한다면, 지니계수는 1이다.

③ 완전히 평등한 소득분배 상태를 나타내는 45도 대각선과 로렌츠곡선 사이의 면적이 클수록, 지니계수는 커진다.

④ 지니계수는 완전히 평등한 소득분배 상태를 나타내는 45도 대각선의 길이를 로렌츠곡선의 길이로 나눈 값이다.

⑤ 지니계수는 빈곤층을 구분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소득수준을 의미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지니계수의 정의와 로렌츠곡선에서의 기하학적 의미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지니계수는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하나의 수치로 나타낸 지표이다.
45도 대각선은 완전평등선이고, 로렌츠곡선은 누적 인구비율에 대응하는 누적 소득비율을 나타낸다.
완전평등선과 로렌츠곡선 사이의 면적을 A, 로렌츠곡선 아래의 면적을 B라고 하면 지니계수는 $A/(A+B)$이다.
따라서 두 선이 일치하면 0이고, 두 선 사이의 면적이 커질수록 1에 가까워진다.

선지별 해설

① X — 지니계수가 같다는 것은 소득불평등의 종합적인 정도가 같다는 뜻일 뿐, 소득계층별 소득분포까지 같다는 뜻은 아니다. 틀린 표현은 '소득계층별 소득분포가 같음'이며, 올바르게는 '서로 다른 소득분포도 같은 지니계수를 가질 수 있음'이다.
② X — 45도 대각선과 로렌츠곡선이 일치하면 두 선 사이의 면적이 0이므로 지니계수는 0이다. 틀린 값은 '1'이며, 올바른 값은 '0'이다.
③ O — 완전평등선과 로렌츠곡선 사이의 면적이 커질수록 실제 소득분포가 완전평등에서 더 멀어지므로 지니계수가 커진다.
④ X — 지니계수는 두 선의 길이를 비교한 값이 아니라 면적의 비율이다. 틀린 표현은 '45도 대각선의 길이를 로렌츠곡선의 길이로 나눈 값'이며, 올바르게는 '두 선 사이의 면적을 완전평등선 아래 전체 면적으로 나눈 값'이다.
⑤ X — 빈곤층을 구분하는 기준 소득수준은 빈곤선이다. 틀린 표현은 '지니계수'이며, 올바르게는 '빈곤선'이다. 지니계수는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낸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②에서 완전평등을 지니계수 1과 연결하거나, ④에서 지니계수를 곡선의 길이 비율로 오해하는 것이 핵심 함정이다. 또한 ⑤는 불평등 지표인 지니계수와 빈곤 여부의 기준인 빈곤선을 바꾸어 놓았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완전평등선과 로렌츠곡선의 간격을 먼저 본다. 두 선이 일치하면 지니계수는 0이고, 사이의 면적이 커질수록 지니계수도 커진다. 지니계수는 분포 전체를 요약한 불평등 지표이므로 같은 값이 동일한 소득분포를 보장하지 않는다.

암기 포인트

완전평등은 0, 불평등 확대는 면적 확대와 지니계수 상승이다. 지니계수는 불평등도, 빈곤선은 빈곤 판별 기준이다.

NoteBase

문 103. 독점기업의 수요곡선은 $P = -Q + 12$이고, 한계비용은 4이다. 원자재 가격의 하락으로 한계비용이 1만큼 감소하는 경우, 이윤을 극대화하는 생산량의 변화는? (단, P는 가격, Q는 수량, $P > 0$, $Q > 0$이다.)

① 0.5 증가

② 0.5 감소

③ 1.0 증가

④ 1.0 감소

⑤ 변화 없음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선형 수요곡선에서 한계수입을 구한 뒤 독점기업의 이윤극대화 조건인 $MR = MC$를 적용하여 한계비용 하락 전후의 생산량 변화를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역수요함수는 $P = 12 - Q$, 최초 한계비용은 $MC = 4$이다.
변화한 값: 한계비용이 1만큼 하락하므로 새로운 한계비용은 $MC = 3$이다.
구해야 할 값: 한계비용 하락 전후의 이윤극대화 생산량 차이이다.

사용할 공식

총수입은 가격과 수량의 곱이므로
$TR = P \cdot Q = (12 - Q)Q = 12Q - Q^2$
이고, 한계수입은
$MR = \frac{dTR}{dQ} = 12 - 2Q$
이다. 독점기업은 한 단위를 더 생산할 때 얻는 추가 수입과 추가 비용이 같아지는 $MR = MC$에서 이윤을 극대화하므로 이 조건을 사용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1. 최초 한계비용이 $MC = 4$일 때
$12 - 2Q = 4 \Rightarrow Q = 4$
이다.
2. 한계비용이 1만큼 하락한 뒤에는 $MC = 3$이므로
$12 - 2Q = 3 \Rightarrow Q = 4.5$
이다.
3. 따라서 생산량 변화는
$\Delta Q = 4.5 - 4 = 0.5$
이므로 생산량은 0.5 증가한다.

선지 판단

① O — 계산 결과 생산량이 4에서 4.5로 변하므로 '0.5 증가'가 맞다.
② X — '0.5 감소'는 변화 방향이 반대이다. 올바르게는 생산량이 0.5 증가한다.
③ X — '1.0 증가'는 생산량 변화의 크기를 잘못 계산한 것이다. 올바르게는 한계수입곡선의 기울기가 -2이므로 한계비용이 1 하락할 때 생산량은 0.5 증가한다.
④ X — '1.0 감소'는 변화의 크기와 방향이 모두 틀리다. 올바르게는 생산량이 0.5 증가한다.
⑤ X — 한계비용이 하락하면 $MR = MC$를 만족하는 생산량이 4에서 4.5로 커진다. 따라서 '변화 없음'이 아니라 0.5 증가이다.

오답 포인트

수요곡선 $P = 12 - Q$를 그대로 한계수입곡선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 선형 역수요함수의 절편은 같지만 한계수입곡선의 기울기는 두 배이므로 $MR = 12 - 2Q$이다. 또한 한계비용이 하락하면 이윤극대화 생산량은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증가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역수요함수에서 먼저 $TR = P \cdot Q$와 MR을 구하고, 변화 전후에 각각 $MR = MC$를 적용한 뒤 두 생산량의 차이와 방향을 비교한다.

암기 포인트

선형 역수요 $P = a - bQ$이면 $MR = a - 2bQ$이다. 한계비용이 하락하면 독점기업의 이윤극대화 생산량은 증가한다.

NoteBase

문 104. 소비자 A의 효용함수는 $U = X \cdot Y$이고, X재, Y재 가격은 모두 10이며, A의 소득은 200이다. 소비자 A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X재, Y재의 소비조합은? (단, $X > 0$, $Y > 0$이다.)

① 8, 12

② 9, 11

③ 10, 10

④ 10, 20

⑤ 20, 10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콥-더글러스 효용함수 $U = X \cdot Y$에서 예산제약과 한계대체율 조건을 이용해 효용극대화 소비조합을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P_X = 10$, $P_Y = 10$, 소득은 200이다.
구해야 할 값: 효용 $U = X \cdot Y$를 가장 크게 하는 (X, Y)이다.
주의할 조건: $X > 0$, $Y > 0$인 내부해이며, 소비조합은 예산제약을 만족해야 한다.

사용할 공식

예산제약은 $10X + 10Y = 200$, 즉 $X + Y = 20$이다.
내부해의 효용극대화 조건은 $MRS_{XY} = MU_X/MU_Y = P_X/P_Y$이다. 여기서 $MU_X = Y$, $MU_Y = X$이므로 $Y/X = 1$이다.
두 재화의 가격이 같고 효용함수의 지수도 같으므로 한계대체율과 가격비율이 같아지는 점에서 두 재화를 같은 양만큼 소비한다.

계산 과정

1. 한계대체율 조건에서 $Y/X = P_X/P_Y = 10/10 = 1$이므로 $X = Y$이다.
2. 이를 예산제약 $X + Y = 20$에 대입하면 $2X = 20$이므로 $X = 10$이다.
3. $Y = 10$이며, 이때 효용은 $U = 10 \cdot 10 = 100$이다. 따라서 효용극대화 소비조합은 $(10, 10)$이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X — (8, 12)는 예산제약을 만족하지만 효용이 $8 \cdot 12 = 96$으로 최대효용 100보다 작다. ‘8, 12’가 아니라 ‘10, 10’이 효용극대화 조합이다.
② X — (9, 11)는 예산제약을 만족하지만 효용이 $9 \cdot 11 = 99$로 최대효용 100보다 작다. ‘9, 11’이 아니라 ‘10, 10’이 효용극대화 조합이다.
③ O — (10, 10)은 예산제약을 만족하고 $MRS_{XY} = P_X/P_Y = 1$이 성립하며 효용 100을 얻으므로 효용극대화 조합이다.
④ X — (10, 20)의 지출은 $10 \cdot 10 + 10 \cdot 20 = 300$으로 소득 200을 초과한다. ‘10, 20’이 아니라 예산제약과 최적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10, 10’이 옳다.
⑤ X — (20, 10)의 지출은 $10 \cdot 20 + 10 \cdot 10 = 300$으로 소득 200을 초과한다. ‘20, 10’이 아니라 예산제약과 최적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10, 10’이 옳다.

오답 포인트

①과 ②는 소득을 모두 지출한다는 조건만 만족할 뿐 한계대체율과 가격비율이 같아지는 최적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 ④와 ⑤는 효용값만 계산하기 전에 지출액이 소득을 초과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는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효용극대화 문제는 먼저 예산제약을 세우고, 내부해에서는 $MRS = P_X/P_Y$를 적용한 뒤, 구한 소비조합이 예산제약을 만족하는지 검산한다.

암기 포인트

$U = X \cdot Y$에서 두 재화의 가격이 같으면 소득을 두 재화에 절반씩 배분하므로 최적 소비량도 같다.

NoteBase

문 105.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수요곡선은 우하향한다.)

①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1보다 작은 경우, 가격이 하락하면 총수입은 증가한다.

②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작아질수록, 물품세 부과로 인한 경제적 순손실(deadweight loss)은 커진다.

③ 소비자 전체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상품일수록,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작아진다.

④ 직선인 수요곡선 상에서 수요량이 많아질수록,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작아진다.

⑤ 좋은 대체재가 많을수록,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작아진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수요의 가격탄력성과 총수입의 관계, 탄력성의 결정 요인, 조세의 경제적 순손실, 직선 수요곡선 위에서의 탄력성 변화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가격이 1% 변할 때 수요량이 몇 % 변하는지를 나타내며, 절댓값은 $\varepsilon_d = \left|\frac{\%\Delta Q}{\%\Delta P}\right|$이다.
탄력적 수요는 $\varepsilon_d > 1$, 비탄력적 수요는 $\varepsilon_d < 1$, 단위탄력적 수요는 $\varepsilon_d = 1$이다.
좋은 대체재가 많고 소비자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가격 변화에 수요량이 더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일반적으로 가격탄력성이 커진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틀린 표현은 "가격이 하락하면 총수입은 증가한다"이다. 수요가 비탄력적이면 가격 하락률보다 수요량 증가율이 작아 가격 하락의 효과가 더 크므로 총수입은 감소한다.

② X
틀린 표현은 "가격탄력성이 작아질수록 경제적 순손실은 커진다"이다. 다른 조건이 같을 때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작으면 세금으로 인한 거래량 감소가 작으므로 경제적 순손실도 작아진다.

③ X
틀린 표현은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상품일수록 가격탄력성은 작아진다"이다. 지출 비중이 큰 상품은 가격 변화가 소비자의 예산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수요량을 더 많이 조정하므로 일반적으로 가격탄력성이 커진다.

④ O
직선 수요곡선에서는 기울기가 일정해도 점탄력성 $\varepsilon_d = \left|\frac{dQ}{dP}\right|\frac{P}{Q}$은 위치에 따라 달라진다. 수요곡선을 따라 아래쪽으로 이동하여 수요량 Q가 많아지면 가격 P는 낮아지고 P/Q가 작아지므로 가격탄력성도 작아진다.

⑤ X
틀린 표현은 "좋은 대체재가 많을수록 가격탄력성은 작아진다"이다. 좋은 대체재가 많으면 가격 상승 시 다른 상품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으므로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커진다.

오답 포인트

탄력성의 크기와 가격 변화 방향만 보고 총수입의 변화를 반대로 판단하기 쉽다. 비탄력적 수요에서는 가격과 총수입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또한 직선 수요곡선의 일정한 기울기를 일정한 탄력성으로 오해하면 ④를 놓치게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탄력성이 1보다 큰지 작은지에 따라 가격과 총수입의 관계를 판단한다. 탄력성의 결정 요인은 가격 변화에 대한 소비자의 대체·조정 가능성으로 판단하고, 직선 수요곡선에서는 기울기가 아니라 P/Q의 변화를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비탄력적 수요에서는 가격과 총수입이 같은 방향이고, 대체재와 지출 비중이 클수록 수요는 더 탄력적이다. 직선 수요곡선은 위쪽에서 탄력적이고 아래쪽에서 비탄력적이다.

NoteBase

문 106. 단기에 A기업은 완전경쟁시장에서 손실을 보고 있지만 생산을 계속하고 있다. 시장수요의 증가로 시장가격이 상승하였는데도 단기에 A기업은 여전히 손실을 보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A기업의 한계비용곡선은 아래로 평행 이동한다.

② A기업의 한계수입곡선은 여전히 평균비용곡선 아래에 있다.

③ A기업의 평균비용은 시장가격보다 낮다.

④ A기업의 총수입은 총가변비용보다 적다.

⑤ A기업의 평균가변비용곡선의 최저점은 시장가격보다 높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완전경쟁기업이 단기에 손실을 보면서도 생산을 계속하는 조건과 시장가격 상승 후에도 손실이 남아 있다는 의미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완전경쟁기업은 시장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므로 평균수입과 한계수입은 모두 시장가격과 같다:
$P = AR = MR$.
이윤극대화 생산량에서는 $P = MR = MC$이고, 손실 상태이면 $P < AC$이다.
단기에는 손실이 있더라도 $P \geq AVC$이면 가변비용을 충당할 수 있어 생산을 계속한다. 따라서 이 기업의 상태는 $AVC \leq P < AC$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시장수요 증가로 시장가격이 상승해도 A기업의 생산기술이나 요소가격이 변한 것은 아니므로 한계비용곡선은 이동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한계비용곡선은 아래로 평행 이동한다'이며, 올바르게는 '한계비용곡선은 이동하지 않고, 기업은 상승한 가격에서 새로운 생산량을 선택한다'이다.

② O
완전경쟁기업의 한계수입은 시장가격과 같다. 가격 상승 후에도 기업이 손실을 본다는 것은 이윤극대화 생산량에서 $MR = P < AC$라는 뜻이므로 한계수입은 여전히 평균비용보다 낮다.

③ X
평균비용이 시장가격보다 낮으면 $P > AC$이므로 단위당 이윤이 양수이고 기업은 이윤을 얻는다. 틀린 표현은 '평균비용은 시장가격보다 낮다'이며, 올바르게는 '손실 상태에서는 이윤극대화 생산량의 평균비용이 시장가격보다 높다'이다.

④ X
총수입이 총가변비용보다 적다는 것은 $TR < TVC$, 즉 $P < AVC$라는 뜻이므로 생산할수록 고정비용보다 더 큰 손실을 입어 조업을 중단하는 편이 낫다. 틀린 표현은 '총수입은 총가변비용보다 적다'이며, 올바르게는 '생산을 계속하는 기업의 총수입은 총가변비용 이상이다'이다.

⑤ X
평균가변비용곡선의 최저점이 시장가격보다 높으면 $P < \min AVC$이므로 시장가격이 조업중단가격보다 낮아 생산을 중단한다. 틀린 표현은 '평균가변비용곡선의 최저점은 시장가격보다 높다'이며, 올바르게는 '생산을 계속하려면 시장가격이 평균가변비용곡선의 최저점 이상이어야 한다'이다.

오답 포인트

손실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곧바로 조업 중단과 연결하면 ④나 ⑤를 고르기 쉽다. 단기 조업 여부는 평균비용이 아니라 평균가변비용과 가격을 비교하여 판단한다. 이 기업은 손실 상태이므로 $P < AC$이지만 생산을 계속하므로 $P \geq AVC$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완전경쟁기업에서는 먼저 $P = MR$를 놓고, 이윤·손실은 가격과 평균비용을 비교하며 조업 여부는 가격과 평균가변비용을 비교한다. '손실이지만 생산 계속'이라는 조건이 나오면 $AVC \leq P < AC$를 적용한다.

암기 포인트

손실 판단은 $P < AC$, 조업 계속 판단은 $P \geq AVC$이다.

NoteBase

문 107. 2국 2재화의 경제에서, 한국과 말레이시아는 비교우위를 갖는 상품을 생산하여 교역을 한다. 한국은 쌀 1섬을 얻기 위해 옷 1벌의 대가를 치러야 하고, 말레이시아는 옷 1벌을 얻기 위해 쌀 2섬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한국이 쌀 생산에 특화하여 수출하는 경우, 양국 모두 이득을 얻을 수 있다.

② 한국이 옷을 수출하면서 옷 1벌에 대해 쌀 2섬 이상을 요구하면, 말레이시아는 스스로 옷을 생산하기로 결정할 것이다.

③ 쌀 1섬의 국제가격이 옷 1/2벌보다 더 낮아야 교역이 이루어진다.

④ 말레이시아가 옷과 쌀 모두를 생산하여 수출하는 경우, 양국 모두 이득을 얻을 수 있다.

⑤ 두 나라 사이에 교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쌀 1섬의 국제가격이 옷 1벌보다 더 높아야 한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각국의 기회비용을 비교해 비교우위 상품과 상호 이익이 가능한 교역조건을 판단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한국: 쌀 1섬의 기회비용은 옷 1벌이므로, 옷 1벌의 기회비용도 쌀 1섬이다.
말레이시아: 옷 1벌의 기회비용은 쌀 2섬이므로, 쌀 1섬의 기회비용은 옷 $\frac{1}{2}$벌이다.
따라서 옷은 한국이, 쌀은 말레이시아가 비교우위를 가진다.

사용할 공식

옷 1벌을 기준으로 한 상호 이익의 교역조건은 $1 < \frac{P_C}{P_R} < 2$이다. 여기서 P_C/P_R는 옷 1벌과 교환되는 쌀의 수량이다.
쌀 1섬을 기준으로 쓰면 같은 조건은 $\frac{1}{2} < \frac{P_R}{P_C} < 1$이다. 국제교환비율이 두 나라의 국내 기회비용 사이에 있어야 양국 모두 교역이득을 얻기 때문에 이 범위를 사용한다.

계산 과정

1. 옷 1벌의 기회비용은 한국이 쌀 1섬, 말레이시아가 쌀 2섬이다.
2. 옷의 기회비용이 더 낮은 한국은 옷에 비교우위가 있고, 쌀의 기회비용이 더 낮은 말레이시아는 쌀에 비교우위가 있다.
3. 한국은 옷 1벌을 쌀 1섬보다 많이 받고 수출하려 하고, 말레이시아는 쌀 2섬보다 적게 주고 옷을 수입하려 한다. 따라서 옷 1벌의 교역조건은 쌀 1섬 초과 2섬 미만이어야 양국 모두 이득을 얻는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X — 한국은 쌀이 아니라 옷에 비교우위가 있다. 틀린 표현인 '한국이 쌀 생산에 특화하여 수출'은 '한국이 옷 생산에 특화하여 수출'로 고쳐야 한다.
② O — 말레이시아가 옷 1벌을 국내에서 생산할 때 드는 비용은 쌀 2섬이다. 한국이 쌀 2섬 이상을 요구하면 수입이 국내 생산보다 유리하지 않으므로 말레이시아는 옷을 수입할 유인이 없고 스스로 생산하게 된다.
③ X — 쌀 1섬의 국제가격이 옷 $\frac{1}{2}$벌보다 더 낮으면 쌀 수출국인 말레이시아가 이득을 얻지 못한다. 틀린 표현인 '옷 $\frac{1}{2}$벌보다 더 낮아야'는 '옷 $\frac{1}{2}$벌보다 높고 옷 1벌보다 낮아야'로 고쳐야 한다.
④ X — 비교우위에 따른 특화에서는 말레이시아가 쌀을 생산·수출하고 한국이 옷을 생산·수출한다. 틀린 표현인 '말레이시아가 옷과 쌀 모두를 생산하여 수출'은 '말레이시아가 쌀에 특화하여 수출'로 고쳐야 한다.
⑤ X — 쌀 1섬의 국제가격이 옷 1벌보다 높으면 한국은 쌀을 수입하는 것보다 국내에서 생산하는 편이 유리하다. 틀린 표현인 '옷 1벌보다 더 높아야'는 '옷 $\frac{1}{2}$벌보다 높고 옷 1벌보다 낮아야'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교역조건을 어느 상품 1단위 기준으로 표시했는지 혼동하기 쉽다. 옷 1벌 기준 범위는 쌀 1섬 초과 2섬 미만이고, 이를 뒤집은 쌀 1섬 기준 범위는 옷 $\frac{1}{2}$벌 초과 1벌 미만이다. 또한 비교우위는 기회비용이 더 낮은 상품에서 발생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두 나라의 기회비용을 같은 상품 1단위 기준으로 통일한다. 기회비용이 낮은 나라의 비교우위 상품을 정한 뒤, 두 국내 기회비용 사이에 국제교환비율이 있는지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비교우위는 낮은 기회비용, 교역조건은 두 나라의 기회비용 사이이다.

NoteBase

문 108. 휴대폰의 수요곡선은 $Q = -2P + 100$이고, 공급곡선은 $Q = 3P - 20$이다. 정부가 휴대폰 1대당 10의 종량세 형태의 물품세를 공급자에게 부과하였다면, 휴대폰 공급자가 부담하는 총 조세부담액은? (단, P는 가격, Q는 수량, $P > 0$, $Q > 0$이다.)

① 120

② 160

③ 180

④ 200

⑤ 220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종량세 부과 전후의 균형을 비교하여 공급자의 단위당 조세부담과 총 조세부담액을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수요곡선은 $Q = -2P + 100$, 공급곡선은 $Q = 3P - 20$이다.
휴대폰 1대당 종량세는 10이다.
세금 부과 후 소비자가 내는 가격을 P_c, 공급자가 세금을 제외하고 받는 가격을 P_s라 하면 $P_c - P_s = 10$이다.
구해야 할 값은 공급자의 단위당 부담액이 아니라 공급자의 총 조세부담액이다.

사용할 공식

공급자의 단위당 조세부담은 세금 부과 전 균형가격-P_s이고, 공급자의 총 조세부담액은 다음과 같다.
(세금 부과 전 균형가격-P_s)×세금 부과 후 거래량
조세가 공급자에게 부과되어도 경제적 부담은 수요와 공급의 가격 반응에 따라 소비자와 공급자에게 나뉘므로, 세금 부과 전후의 균형가격과 거래량을 비교해야 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1. 세금 부과 전에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으므로
$-2P + 100 = 3P - 20$
에서 $P = 24, Q = 52$이다.

2. 세금 부과 후 수요에는 소비자가격 P_c, 공급에는 공급자의 수취가격 P_s가 적용된다.
$Q = -2P_c + 100, \quad Q = 3P_s - 20, \quad P_c = P_s + 10$
수요식에 $P_c = P_s + 10$을 대입하면
$-2(P_s + 10) + 100 = 3P_s - 20$
이므로 $P_s = 20, P_c = 30, Q = 40$이다.

3. 공급자의 단위당 부담은 $24 - 20 = 4$이고, 총 조세부담액은
$4 \times 40 = 160$
이다. 전체 조세수입 400 중 공급자가 160, 소비자가 $(30 - 24) \times 40 = 240$을 부담한다.

선지 판단

① X — 120은 공급자의 총 조세부담액이 아니다. 공급자의 단위당 부담은 3이 아니라 $24 - 20 = 4$이므로, 120이 아니라 $4 \times 40 = 160$이다.
② O — 공급자의 단위당 부담 4에 세금 부과 후 거래량 40을 곱하면 총 조세부담액은 160이다.
③ X — 180은 계산된 공급자 부담과 일치하지 않는다. 공급자의 가격 하락분은 4이고 거래량은 40이므로, 올바른 값은 180이 아니라 160이다.
④ X — 200은 공급자가 세금 10의 절반인 5를 부담한다고 임의로 가정한 값이다. 수요와 공급의 기울기가 다르므로 부담이 절반씩 나뉘지 않으며, 올바른 값은 160이다.
⑤ X — 220은 세금 부과 전 거래량이나 소비자 부담을 섞어 계산한 값으로도 정당화되지 않는다. 세금 부과 후 거래량 40과 공급자의 단위당 부담 4를 사용해야 하므로, 올바른 값은 160이다.

오답 포인트

세금을 공급자에게 부과한다는 문구를 공급자가 세금 전액을 경제적으로 부담한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또한 총 조세부담액은 단위당 부담 4에 세금 부과 후 거래량 40을 곱해야 하며, 세금 부과 전 거래량 52를 사용하지 않는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종량세 문제에서는 먼저 세금 부과 전 균형을 구하고, 다음으로 P_c-P_s=세액을 반영한 세금 부과 후 균형을 구한다. 그 뒤 각 경제주체의 단위당 가격 변화에 세금 부과 후 거래량을 곱하여 총 부담액을 판단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법적 납세자와 경제적 조세부담자는 다를 수 있다. 공급자 총부담은 (세전가격-세후 공급자 수취가격)×세후거래량이다.

NoteBase

문 109. 독점적 경쟁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업의 수요곡선은 우하향하는 형태이다.

② 진입장벽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단기에는 기업이 양(+)의 이윤을 얻지 못한다.

③ 기업의 이윤극대화 가격은 한계비용보다 크다.

④ 단기에 기업의 한계수입곡선과 한계비용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이윤극대화 생산량이 결정된다.

⑤ 장기에 기업의 수요곡선과 평균비용곡선이 접하는 점에서 이윤극대화 생산량이 결정된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독점적 경쟁시장에서 개별 기업이 직면하는 수요와 단기·장기 균형의 차이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독점적 경쟁시장은 다수의 기업이 서로 차별화된 상품을 판매하고 진입과 퇴출이 자유로운 시장이다.
단기에는 기업 수가 고정되어 양(+)의 경제적 이윤, 0의 경제적 이윤, 손실이 모두 가능하다. 장기에는 양(+)의 경제적 이윤이 있으면 새로운 기업이 진입하므로 기존 기업의 수요가 감소하고, 최종적으로 수요곡선이 평균비용곡선에 접하여 경제적 이윤이 0이 된다.

선지별 해설

① O — 상품이 차별화되어 개별 기업은 어느 정도의 가격 결정력을 가지므로 기업의 수요곡선은 우하향한다.
② X — 틀린 표현은 "단기에는 기업이 양(+)의 이윤을 얻지 못한다"이다. 진입장벽이 없더라도 진입에는 시간이 필요하므로 단기에는 양(+)의 경제적 이윤을 얻을 수 있다. 진입으로 경제적 이윤이 0이 되는 것은 장기이다.
③ O — 우하향하는 수요곡선에서는 한계수입이 가격보다 작다. 이윤극대화 조건이 $MR = MC$이므로 이윤극대화 생산량에서 $P > MR = MC$, 즉 가격이 한계비용보다 크다.
④ O — 단기 이윤극대화 생산량은 한계수입곡선과 한계비용곡선이 만나는 $MR = MC$에서 결정된다.
⑤ O — 장기 균형에서는 진입과 퇴출로 경제적 이윤이 0이 되어 기업의 수요곡선이 평균비용곡선에 접한다. 이 접점의 생산량은 동시에 $MR = MC$를 충족하는 이윤극대화 생산량이다.

오답 포인트

②는 "진입장벽이 없다"는 장기 조건을 단기 이윤에 곧바로 적용한 것이 함정이다. 자유로운 진입은 단기의 양(+)의 경제적 이윤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 균형에서 그 이윤을 0으로 만든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단기에는 $MR = MC$로 생산량을 정하고 수요곡선에서 가격을 찾은 뒤 평균비용과 비교하여 이윤을 판단한다.
장기에는 자유로운 진입·퇴출 때문에 수요곡선과 평균비용곡선이 접하고 경제적 이윤이 0이 되는지를 확인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독점적 경쟁은 단기 이윤 가능, 장기 경제적 이윤 0, 그리고 $P > MC$이다.

NoteBase

문 110. A기업은 노동시장에서 수요독점자이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단, A기업은 생산물시장에서 가격수용자이다.)

① 균형에서 임금은 한계요소비용(marginal factor cost)보다 낮다.

② 균형에서 노동의 한계생산가치(VMP_L)와 한계요소비용이 같다.

③ 한계요소비용곡선은 노동공급곡선의 아래쪽에 위치한다.

④ 균형에서 완전경쟁인 노동시장에 비해 노동의 고용량이 더 적어진다.

⑤ 균형에서 완전경쟁인 노동시장에 비해 노동의 가격이 더 낮아진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노동시장의 수요독점자가 직면하는 노동공급곡선과 한계요소비용곡선의 관계 및 고용·임금 결정 원리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노동시장 수요독점은 한 기업이 노동의 주된 수요자로서 고용량을 늘리려면 더 높은 임금을 제시해야 하는 시장이다. 우상향하는 노동공급곡선에서는 추가 노동자에게 지급할 임금뿐 아니라 기존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임금도 올라가므로 한계요소비용이 임금보다 크고, 한계요소비용곡선은 노동공급곡선의 위쪽에 위치한다. 기업은 VMP_L = MFC인 고용량을 선택하고, 그 고용량에 대응하는 노동공급곡선상의 임금을 지급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 수요독점자는 노동공급곡선보다 위에 있는 한계요소비용곡선에 직면하므로 균형에서 임금은 한계요소비용보다 낮다.
② O — 생산물시장에서 가격수용자이므로 노동의 한계수입생산은 한계생산가치 VMP_L와 같으며, 이윤극대화 고용량에서는 VMP_L = MFC가 성립한다.
③ X — 틀린 표현은 '한계요소비용곡선은 노동공급곡선의 아래쪽'이다. 올바르게는 한계요소비용곡선이 노동공급곡선의 위쪽에 위치한다.
④ O — 완전경쟁 노동시장에서는 노동공급과 VMP_L가 만나는 수준까지 고용하지만, 수요독점자는 더 높은 한계요소비용과 VMP_L가 만나는 수준에서 고용하므로 고용량이 더 적다.
⑤ O — 수요독점자의 고용량은 완전경쟁 때보다 적고, 그 고용량에 대응하는 우상향 노동공급곡선상의 임금도 완전경쟁 임금보다 낮다.

오답 포인트

③은 평균요소비용에 해당하는 노동공급곡선과 한계요소비용곡선의 위치를 뒤바꾼 선지이다. 고용을 늘릴 때 기존 노동자의 임금까지 올려야 하므로 한계요소비용은 임금보다 커진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노동공급이 우상향하는 수요독점에서는 먼저 '한계요소비용곡선은 노동공급곡선 위쪽'을 확인한다. 이어 VMP_L = MFC로 고용량을 정하고 노동공급곡선에서 임금을 읽으면, 완전경쟁보다 고용량과 임금이 모두 낮다는 결론이 나온다.

암기 포인트

수요독점은 'MFC는 공급곡선 위, 고용과 임금은 완전경쟁보다 아래'이다.

NoteBase

문 111. 인플레이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요견인 인플레이션은 총수요의 증가가 인플레이션의 주요한 원인이 되는 경우이다.

② 정부가 화폐공급량 증가를 통해 얻게 되는 추가적인 재정수입을 화폐발행이득(seigniorage)이라고 한다.

③ 물가상승과 불황이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을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한다.

④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은 채권자에게서 채무자에게로 소득재분배를 야기한다.

⑤ 예상한 인플레이션의 경우에는 메뉴비용(menu cost)이 발생하지 않는다.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인플레이션의 원인과 유형, 화폐발행이득, 예상 여부에 따른 비용과 소득재분배 효과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수요견인 인플레이션은 총수요 증가로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이다.
스태그플레이션은 물가상승과 경기침체가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은 고정된 명목 채무의 실질가치를 낮추므로 채무자에게 유리하고 채권자에게 불리하다.
메뉴비용은 기업이 가격을 변경하면서 부담하는 가격표·메뉴·전산 시스템 수정 등의 비용이며, 인플레이션을 예상했더라도 가격을 조정하면 발생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총수요가 경제의 생산능력보다 빠르게 증가하여 물가를 끌어올리는 경우가 수요견인 인플레이션이다.
② O. 정부가 화폐를 발행하여 재원을 조달하면서 얻는 실질 자원을 화폐발행이득이라고 한다.
③ O. 경기침체를 뜻하는 스태그네이션과 물가상승을 뜻하는 인플레이션이 함께 나타나는 현상이 스태그플레이션이다.
④ O.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채무 상환액의 실질가치가 예상보다 작아지므로 채권자가 손해를 보고 채무자가 이익을 얻는다.
⑤ X. 틀린 표현은 "메뉴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이다. 예상한 인플레이션에서도 기업이 물가상승에 맞추어 가격을 변경하면 메뉴비용이 발생한다.

오답 포인트

인플레이션을 예상하면 소득재분배와 같은 일부 불확실성은 줄일 수 있지만, 가격을 실제로 바꾸는 데 드는 메뉴비용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⑤는 예상 가능성과 가격조정 비용을 혼동하게 만든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인플레이션의 예상 여부가 무엇을 바꾸는지 구분한다.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은 고정된 명목 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소득재분배를 일으키고, 예상한 인플레이션도 가격을 자주 조정하게 하므로 메뉴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

암기 포인트

예상 밖 인플레이션은 채권자에서 채무자로 재분배되고, 예상된 인플레이션에도 메뉴비용은 남는다.

NoteBase

문 112. 통화정책의 단기적 효과를 높이는 요인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화폐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 높은 경우
ㄴ.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이 높은 경우
ㄷ.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경우

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통화량 변화가 이자율·투자·국민소득으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화폐수요의 이자율 탄력성,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 한계소비성향이 통화정책의 단기 효과를 어떻게 바꾸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확장적 통화정책의 전달경로는 '통화량 증가 → 이자율 하락 → 투자 증가 → 국민소득 증가'이다.
화폐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 낮을수록 통화량 증가가 이자율을 더 크게 낮추므로 통화정책의 효과가 커진다.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이 높을수록 같은 이자율 하락에도 투자가 더 크게 증가하므로 통화정책의 효과가 커진다.
한계소비성향이 높을수록 투자 증가에서 시작된 승수효과가 커지므로 국민소득이 더 크게 증가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ㄱ은 틀렸다. 화폐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 높으면 증가한 통화가 화폐수요에 많이 흡수되어 이자율 하락 폭이 작아지므로 통화정책의 효과가 약해진다. '높은 경우'는 '낮은 경우'로 고쳐야 하며, 옳은 조합은 ㄴ, ㄷ이다.

② X
ㄴ은 맞지만 ㄷ이 빠졌다.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이 높으면 이자율 하락에 따른 투자 증가가 커지고, 한계소비성향이 높으면 승수효과도 커진다. 따라서 'ㄴ'은 'ㄴ, ㄷ'으로 고쳐야 한다.

③ X
ㄴ은 맞지만 ㄱ은 틀리고 ㄷ이 빠졌다. 화폐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은 낮아야 통화정책의 효과가 커지며, 높은 한계소비성향도 그 효과를 확대한다. 따라서 'ㄱ, ㄴ'은 'ㄴ, ㄷ'으로 고쳐야 한다.

④ O
ㄴ과 ㄷ은 모두 통화정책의 단기 효과를 높인다.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이 높으면 이자율 하락에 투자가 크게 반응하고, 한계소비성향이 높으면 투자 증가의 국민소득 파급효과가 커진다.

⑤ X
ㄴ과 ㄷ은 맞지만 ㄱ은 틀렸다. 화폐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 높을수록 이자율의 반응이 작아져 통화정책의 효과가 약해진다. 따라서 'ㄱ, ㄴ, ㄷ'은 'ㄴ, ㄷ'으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탄력성이 높으면 정책 효과도 항상 커진다'고 일괄 판단하면 ㄱ을 고르게 된다. 투자수요는 이자율에 민감할수록 투자 반응이 커지지만, 화폐수요는 이자율에 민감할수록 통화량 변화가 이자율을 움직이는 힘이 약해진다는 차이가 핵심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통화정책은 두 단계로 판단한다. 먼저 화폐시장에서 이자율이 충분히 변하는지 확인하고, 다음으로 그 이자율 변화가 투자와 국민소득을 크게 움직이는지 확인한다. 화폐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은 낮을수록,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과 한계소비성향은 높을수록 통화정책의 효과가 커진다.

암기 포인트

통화정책 효과 확대 조건은 '화폐수요 탄력성은 낮게, 투자 탄력성과 한계소비성향은 높게'이다.

NoteBase

문 113. 국제수지표 상 경상계정(current accounts)에 속하지 않은 항목은?

① 정부 사이의 무상원조

② 해외교포로부터의 증여성 송금

③ 해외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 등의 투자 소득

④ 내국인의 해외여행 경비

⑤ 내국인의 해외주식 및 채권 투자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국제수지에서 경상계정과 금융계정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경상계정은 재화·서비스의 거래와 생산요소 소득, 대가 없이 주고받는 경상적 이전을 기록한다.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가 이에 해당한다.
금융계정은 주식·채권 등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취득·처분을 기록한다.
따라서 여행 경비·이자 소득·증여성 송금은 경상계정에, 해외주식·채권 투자는 금융계정에 기록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정부 사이의 무상원조는 반대급부 없이 이전되는 경상적 이전으로서 경상계정의 이전소득수지에 포함된다.

② O
해외교포로부터의 증여성 송금은 재화나 서비스 제공의 대가가 아닌 이전소득이므로 경상계정에 포함된다.

③ O
해외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이자 등의 투자 소득은 생산요소인 자본을 제공한 대가이므로 경상계정의 본원소득수지에 포함된다.

④ O
내국인의 해외여행 경비는 해외에서 제공받은 여행 서비스를 수입한 대가이므로 경상계정의 서비스수지에 포함된다.

⑤ X
내국인의 해외주식 및 채권 투자는 금융자산을 취득하는 거래이므로 경상계정에 속하지 않는다. 틀린 부분은 이를 경상계정 항목으로 보는 것이며, 올바르게는 금융계정의 증권투자에 기록된다.

오답 포인트

③의 이자 소득과 ⑤의 주식·채권 투자를 모두 금융과 관련된 항목으로 보아 같은 계정에 넣기 쉽다.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은 경상계정이지만, 금융자산 자체를 사고파는 거래는 금융계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거래의 대상이 재화·서비스·소득·경상적 이전이면 경상계정으로 판단하고, 주식·채권 등 금융자산 자체의 취득·처분이면 금융계정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자산이 벌어 준 이자·배당은 경상계정, 자산 자체를 사고파는 투자는 금융계정이다.

NoteBase

문 114. A국의 2014년 명목 GDP는 100억원이었고, 2015년 명목 GDP는 150억원이었다. 기준년도인 2014년 GDP 디플레이터가 100이고, 2015년 GDP 디플레이터는 120인 경우, 2015년의 전년대비 실질 GDP 증가율은?

① 10%

② 15%

③ 20%

④ 25%

⑤ 30%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GDP 디플레이터로 명목 GDP를 실질 GDP로 환산한 뒤 전년 대비 실질 GDP 증가율을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2014년 명목 GDP 100억원, 2015년 명목 GDP 150억원, 2014년 GDP 디플레이터 100, 2015년 GDP 디플레이터 120이다.
구해야 할 값: 2015년의 전년 대비 실질 GDP 증가율이다.
주의할 조건: 명목 GDP 증가율을 바로 계산하지 않고, 각 연도의 명목 GDP를 해당 연도의 GDP 디플레이터로 나누어 실질 GDP로 바꾼다.

사용할 공식

실질 GDP=명목 GDPGDP 디플레이터× 100
실질 GDP 증가율=당해 연도 실질 GDP-전년 실질 GDP전년 실질 GDP× 100\%
GDP 디플레이터는 기준연도 가격 수준을 100으로 나타낸 지수이므로, 명목 GDP에서 물가 변동의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 첫 번째 공식을 사용한다.

계산 과정

1. 2014년 실질 GDP는 100/100 × 100 = 100억원이다.
2. 2015년 실질 GDP는 150/120 × 100 = 125억원이다.
3. 2015년의 전년 대비 실질 GDP 증가율은 (125 − 100)/100 × 100% = 25%이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X — 10%는 계산 결과 25%와 일치하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실질 GDP가 100억원에서 125억원으로 증가하므로 증가율은 25%이다.
② X — 15%는 계산 결과 25%와 일치하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2015년 명목 GDP를 GDP 디플레이터 120으로 조정한 실질 GDP 125억원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25%가 된다.
③ X — 20%는 GDP 디플레이터가 100에서 120으로 상승한 물가 상승률이므로 실질 GDP 증가율이 아니다. 올바르게는 물가 효과를 제거한 뒤 실질 GDP 증가율 25%를 구한다.
④ O — 2014년 실질 GDP 100억원과 2015년 실질 GDP 125억원을 비교하면 증가율은 25%이다.
⑤ X — 30%는 계산 결과 25%와 일치하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실질 GDP의 증가분 25억원을 전년 실질 GDP 100억원으로 나누어 25%로 계산한다.

오답 포인트

명목 GDP는 50% 증가했지만 물가 수준도 상승했으므로 이를 실질 GDP 증가율로 볼 수 없다. 또한 ③의 20%는 GDP 디플레이터의 상승률일 뿐 산출량의 실질 증가율이 아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각 연도의 명목 GDP를 해당 연도의 GDP 디플레이터로 나누고 100을 곱해 실질 GDP로 환산한 다음, 전년 실질 GDP를 분모로 증가율을 계산한다.

암기 포인트

명목 GDP를 디플레이터로 나누면 물가 효과가 제거되고, 실질 GDP 증가율은 산출량의 증가율을 나타낸다.

NoteBase

문 115. 장기 총공급곡선의 이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연실업률이 증가하면, 왼쪽으로 이동한다.

② 인적자본이 증가하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③ 생산을 증가시키는 자원이 발견되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④ 기술지식이 진보하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⑤ 예상물가수준이 하락하면, 왼쪽으로 이동한다.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장기 총공급곡선은 경제의 잠재생산량에 의해 결정되며, 생산요소의 양·질이나 생산기술이 변할 때 이동한다는 점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장기 총공급곡선은 물가수준과 관계없이 완전고용 상태에서 생산할 수 있는 잠재생산량을 나타내는 수직선이다. 노동·자본·자연자원·기술 등 생산능력이 커지면 오른쪽으로, 작아지면 왼쪽으로 이동한다. 예상물가수준의 변화는 경제의 생산능력을 바꾸지 않으므로 장기 총공급곡선을 이동시키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① O — 자연실업률이 증가하면 완전고용 상태의 고용량과 잠재생산량이 감소하므로 장기 총공급곡선은 왼쪽으로 이동한다.
② O — 인적자본이 증가하면 노동자의 생산성이 높아져 잠재생산량이 증가하므로 장기 총공급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③ O — 생산에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 새로 발견되면 생산요소가 증가하여 경제의 생산능력이 커지므로 장기 총공급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④ O — 기술지식의 진보는 동일한 생산요소로 더 많은 산출량을 생산하게 하므로 잠재생산량이 증가하고 장기 총공급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⑤ X — 틀린 표현은 '예상물가수준이 하락하면, 왼쪽으로 이동한다'이다. 예상물가수준의 하락은 잠재생산량을 바꾸지 않으므로 장기 총공급곡선은 이동하지 않는다. 단기 총공급곡선에서는 다른 조건이 같을 때 예상물가수준의 하락이 오른쪽 이동 요인이 될 수 있다.

오답 포인트

⑤는 예상물가수준이 총공급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장기 총공급곡선에도 그대로 적용하게 만드는 함정이다. 예상물가수준은 단기 총공급곡선의 위치에는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장기 생산능력인 잠재생산량 자체를 바꾸지는 않는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변화 요인이 노동·자본·자연자원·기술처럼 잠재생산량을 바꾸는지를 판단한다. 잠재생산량이 증가하면 장기 총공급곡선은 오른쪽, 감소하면 왼쪽으로 이동한다. 현재 또는 예상 물가만 변하면 장기 총공급곡선은 이동하지 않는다.

암기 포인트

장기 총공급은 생산능력, 단기 총공급은 예상물가의 영향을 받는다.

NoteBase

문 116.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기업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가 확대되면, 대부자금에 대한 수요가 ( )한다. 이렇게 되면 실질이자율이 ( )하고 저축이 늘어난다. 그 결과, 대부자금의 균형거래량은 ( )한다. (단, 실질이자율에 대하여 대부자금 수요곡선은 우하향하고, 대부자금 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

① 증가, 상승, 증가

② 증가, 하락, 증가

③ 증가, 상승, 감소

④ 감소, 하락, 증가

⑤ 감소, 하락, 감소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투자세액공제 확대가 대부자금 수요곡선을 어느 방향으로 이동시키고, 그 결과 균형 실질이자율과 균형거래량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투자세액공제는 기업의 투자 비용을 낮춰 투자를 늘리는 제도이다. 기업의 투자 증가는 자금을 빌리려는 수요의 증가이므로 대부자금 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대부자금 공급곡선이 우상향하는 상태에서 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균형 실질이자율과 대부자금의 균형거래량이 모두 증가한다. 실질이자율 상승은 저축의 보상을 높이므로 저축도 늘어난다.

선지별 해설

① O — 투자세액공제 확대는 대부자금 수요를 증가시키고, 수요곡선의 우측 이동은 균형 실질이자율을 상승시키며 균형거래량을 증가시킨다.
② X — 틀린 표현은 '실질이자율이 하락'이다. 대부자금 수요가 증가하면 균형 실질이자율은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상승하므로 '증가, 상승, 증가'가 된다.
③ X — 틀린 표현은 '균형거래량은 감소'이다. 수요 증가로 균형 실질이자율과 균형거래량이 함께 증가하므로 '증가, 상승, 증가'가 된다.
④ X — 틀린 표현은 '대부자금 수요가 감소'와 '실질이자율이 하락'이다. 투자세액공제 확대는 투자와 대부자금 수요를 늘리고 균형 실질이자율을 높이므로 '증가, 상승, 증가'가 된다.
⑤ X — '감소, 하락, 감소'가 모두 반대이다. 투자세액공제 확대에 따른 대부자금 수요곡선의 우측 이동으로 수요, 균형 실질이자율, 균형거래량이 모두 증가하므로 '증가, 상승, 증가'가 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투자세액공제 확대를 가계의 저축 유인 변화로 보아 공급곡선을 먼저 이동시키거나, 이자율 상승 때문에 기업의 대부자금 수요량이 줄어드는 움직임과 대부자금 수요곡선 자체의 우측 이동을 혼동하기 쉽다. 이 문항의 최초 변화는 기업 투자 증가에 따른 대부자금 수요 증가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정책이 기업 투자를 촉진하면 먼저 대부자금 수요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킨다. 그다음 우상향하는 공급곡선과의 새 교점을 찾아 균형 실질이자율과 균형거래량이 모두 증가한다고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투자세액공제 확대 → 투자 증가 → 대부자금 수요 증가 → 실질이자율 상승·균형거래량 증가이다.

NoteBase

문 117. 법정지불준비율이 0.2이고, 은행시스템 전체의 지불준비금은 300만원이다. 은행 시스템 전체로 볼 때 요구불예금의 크기는? (단, 초과지불준비금은 없고, 현금 통화비율은 0이다.)

① 1,000만원

② 1,200만원

③ 1,500만원

④ 2,000만원

⑤ 2,500만원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법정지불준비율과 은행 시스템 전체의 지불준비금을 이용해 요구불예금의 총액을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법정지불준비율 0.2, 지불준비금 300만원
구해야 할 값: 은행 시스템 전체의 요구불예금
주의할 조건: 초과지불준비금이 없으므로 실제 지불준비금은 법정지불준비금과 같고, 현금 통화비율이 0이므로 예금 창출 과정에서 현금으로 빠져나가는 금액이 없다.

사용할 공식

지불준비금을 R, 법정지불준비율을 r, 요구불예금을 D라고 하면
$R = rD$
따라서
$D = \frac{R}{r}$
이다. 초과지불준비금과 현금 보유가 없다는 조건에서 은행 시스템 전체의 지불준비금은 요구불예금에 법정지불준비율을 곱한 금액이므로 이 공식을 사용한다.

계산 과정

법정지불준비율 0.2는 예금의 20%를 지불준비금으로 보유한다는 뜻이다.
D=300만원0.2=1,500만원
따라서 요구불예금의 크기는 1,500만원이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X — 1,000만원에 법정지불준비율 0.2를 곱하면 지불준비금은 200만원이므로 주어진 300만원과 일치하지 않는다. 틀린 값 1,000만원 → 올바른 값은 1,500만원이다.
② X — 1,200만원에 법정지불준비율 0.2를 곱하면 지불준비금은 240만원이므로 주어진 300만원과 일치하지 않는다. 틀린 값 1,200만원 → 올바른 값은 1,500만원이다.
③ O — 1,500만원에 법정지불준비율 0.2를 곱하면 지불준비금이 300만원이 되어 문제의 조건과 정확히 일치한다.
④ X — 2,000만원에 법정지불준비율 0.2를 곱하면 지불준비금은 400만원이므로 주어진 300만원과 일치하지 않는다. 틀린 값 2,000만원 → 올바른 값은 1,500만원이다.
⑤ X — 2,500만원에 법정지불준비율 0.2를 곱하면 지불준비금은 500만원이므로 주어진 300만원과 일치하지 않는다. 틀린 값 2,500만원 → 올바른 값은 1,500만원이다.

오답 포인트

법정지불준비율은 '지불준비금 ÷ 요구불예금'이다. 요구불예금을 구할 때 300만원에 0.2를 곱하는 것이 아니라 0.2로 나누어야 한다. 또한 초과지불준비금과 현금 통화비율이 모두 0이라는 조건 때문에 단순한 법정지불준비율 관계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초과지불준비금과 현금 유출 여부를 확인한 뒤, 둘 다 없다면 $D = R/r$을 적용하고 마지막에 $rD = R$이 성립하는지 역산하여 검산한다.

암기 포인트

예금은 준비금을 준비율로 나눈 값이다: $D = R/r$.

NoteBase

문 118. 통화공급이 감소하고 정부지출이 증가하는 경우, IS-LM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물가가 고정된 폐쇄경제이고, IS 곡선은 우하향, LM 곡선은 우상향한다.)

① 이자율은 불변이고, 소득은 감소한다.

② 이자율은 상승하고, 소득은 증가한다.

③ 이자율은 하락하고, 소득은 감소한다.

④ 이자율은 하락하고, 소득은 증가한다.

⑤ 이자율은 상승하고, 소득의 증감은 불확실하다.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통화공급 감소와 정부지출 증가가 IS 곡선과 LM 곡선을 각각 어느 방향으로 이동시키며, 두 정책이 이자율과 소득에 미치는 효과가 같은지 반대인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통화공급 감소: 화폐시장이 균형을 이루려면 더 높은 이자율이 필요하므로 LM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한다. 이자율을 상승시키고 소득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정부지출 증가: 총수요가 늘어나므로 IS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 이자율과 소득을 모두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두 변화는 이자율을 모두 상승시키지만, 소득에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이자율은 상승하고 소득의 증감은 두 곡선의 이동 폭에 따라 달라진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이자율이 불변이라는 표현과 소득이 감소한다고 단정한 표현이 모두 틀린다. 올바르게는 두 정책 모두 이자율을 상승시키며, 소득의 증감은 불확실하다.

② X
이자율이 상승한다는 부분은 맞지만, 소득이 증가한다고 단정한 부분이 틀린다. 정부지출 증가는 소득을 늘리고 통화공급 감소는 소득을 줄이므로 올바르게는 소득의 증감이 불확실하다.

③ X
통화공급 감소와 정부지출 증가는 모두 이자율을 상승시키므로 이자율이 하락한다는 표현이 틀린다. 또한 소득도 감소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올바르게는 소득의 증감이 불확실하다.

④ X
이자율이 하락한다는 표현과 소득이 증가한다고 단정한 표현이 모두 틀린다. 올바르게는 이자율은 상승하고 소득의 증감은 불확실하다.

⑤ O
통화공급 감소에 따른 LM 곡선의 좌측 이동과 정부지출 증가에 따른 IS 곡선의 우측 이동은 모두 이자율을 상승시킨다. 반면 소득에는 각각 감소와 증가의 반대 효과를 주므로 순효과는 불확실하다.

오답 포인트

정책 하나의 효과만 보고 소득 방향을 확정하는 것이 함정이다. 특히 ②는 정부지출 증가의 소득 증가 효과만 반영하고 통화공급 감소의 소득 감소 효과를 빠뜨린 선지이다. 두 정책의 효과가 같은 방향인 변수와 반대 방향인 변수를 분리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각 정책이 IS 곡선과 LM 곡선을 어느 방향으로 이동시키는지 적고, 변수별 효과의 방향을 합친다. 두 효과가 같은 방향이면 결과가 확정되고, 반대 방향이면 이동 폭이 주어지지 않는 한 결과는 불확실하다.

암기 포인트

통화긴축은 LM 좌측, 재정확장은 IS 우측이다. 함께 시행하면 이자율은 확실히 상승하고 소득은 불확실하다.

NoteBase

문 119. 주어진 물가수준에서, 총수요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는 원인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개별소득세 인하
ㄴ. 장래경기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
ㄷ. 통화량 감소에 따른 이자율 상승
ㄹ. 해외경기 침체에 따른 순수출의 감소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주어진 물가수준에서 소비·투자·정부지출·순수출의 변화가 총수요곡선을 어느 방향으로 이동시키는지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총수요는 $AD = C + I + G + NX$로 나타낸다. 주어진 물가수준에서 소비 C, 투자 I, 정부지출 G, 순수출 NX 중 하나가 증가하면 총수요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감소하면 왼쪽으로 이동한다.
ㄱ. 개별소득세 인하 → 가처분소득 증가 → 소비 증가 → 총수요곡선의 오른쪽 이동이다.
ㄴ. 장래경기에 대한 낙관적 전망 → 기대수익 상승 → 투자와 소비 증가 → 총수요곡선의 오른쪽 이동이다.
ㄷ. 통화량 감소 → 이자율 상승 → 투자 감소 → 총수요곡선의 왼쪽 이동이다.
ㄹ. 해외경기 침체 → 수출 및 순수출 감소 → 총수요곡선의 왼쪽 이동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ㄱ과 ㄴ은 각각 소비 및 투자·소비를 늘리므로 모두 총수요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킨다.
② X — ㄷ을 포함한 부분이 틀렸다. 통화량 감소에 따른 이자율 상승은 투자를 줄여 총수요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킨다. 올바른 조합은 ㄱ, ㄴ이다.
③ X — ㄷ과 ㄹ을 오른쪽 이동 원인으로 묶은 부분이 틀렸다. 두 항목은 각각 투자와 순수출을 감소시키므로 모두 총수요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킨다. 올바른 조합은 ㄱ, ㄴ이다.
④ X — ㄷ을 포함한 부분이 틀렸다. ㄱ과 ㄴ은 오른쪽 이동 원인이지만 ㄷ은 투자 감소를 통해 왼쪽 이동을 일으킨다. 올바른 조합은 ㄱ, ㄴ이다.
⑤ X — ㄷ과 ㄹ을 포함한 부분이 틀렸다. ㄴ만 오른쪽 이동 원인이며, ㄷ과 ㄹ은 각각 투자와 순수출을 줄여 왼쪽 이동을 일으킨다. 올바른 조합은 ㄱ, ㄴ이다.

오답 포인트

이자율 상승 자체를 총수요 증가 신호로 오해하거나, 해외경기 침체가 국내 수입을 줄일 수 있다는 점만 보고 순수출 증가로 판단하기 쉽다. 이 문항에서는 통화량 감소가 투자를 줄이는 경로와 해외경기 침체가 국내 수출을 줄이는 경로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ㄷ과 ㄹ은 모두 총수요 감소 요인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각 사건을 소비·투자·정부지출·순수출 중 어느 항목에 연결되는지 먼저 분류한 뒤, 해당 항목이 증가하면 오른쪽 이동, 감소하면 왼쪽 이동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감세·낙관적 기대는 총수요 증가, 통화량 감소·해외경기 침체는 총수요 감소이다.

NoteBase

문 120. 노동수요의 임금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노동수요의 임금탄력성은 단기보다 장기에서 더 크다.

② 노동수요의 임금탄력성은 총생산비 중 노동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③ 노동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생산요소로의 대체가능성이 클수록 동일한 임금 상승에 대하여 고용감소는 적어진다.

④ 노동수요는 노동을 생산요소로 사용하는 최종생산물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영향을 받는다.

⑤ 노동수요의 임금탄력성은 노동수요량의 변화율을 임금변화율로 나눈 것이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노동수요의 임금탄력성을 결정하는 요인과 각 요인이 고용량 조정에 미치는 방향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노동수요의 임금탄력성은 임금이 1% 변할 때 노동수요량이 몇 % 변하는지를 나타내며, 일반적으로 그 절댓값으로 반응 정도를 비교한다.
노동수요는 장기일수록 생산방식 조정이 쉽고, 다른 생산요소로 노동을 대체하기 쉬울수록 임금 변화에 더 크게 반응한다. 또한 총생산비 중 노동비용의 비중과 최종생산물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클수록 노동수요의 임금탄력성도 커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장기에는 기업이 생산설비와 생산방식을 충분히 조정하고 노동을 다른 생산요소로 대체할 수 있으므로 노동수요의 임금탄력성이 단기보다 크다.
② O — 총생산비 중 노동비용의 비중이 크면 임금 상승이 총비용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므로 기업의 고용량 조정 폭도 커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③ X — 틀린 표현은 '대체가능성이 클수록 고용감소는 적어진다'이다. 노동을 다른 생산요소로 쉽게 대체할 수 있을수록 임금 상승 시 노동을 더 많이 줄일 수 있으므로 고용감소는 커지고 노동수요의 임금탄력성도 커진다.
④ O — 최종생산물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크면 임금 상승에 따른 생산비와 제품가격의 상승이 판매량을 크게 줄이고, 파생수요인 노동수요도 크게 감소한다.
⑤ O — 노동수요의 임금탄력성은 노동수요량의 변화율을 임금변화율로 나눈 값이다. 노동수요곡선은 보통 우하향하므로 부호는 음(-)이지만, 반응 크기를 비교할 때에는 흔히 절댓값을 사용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③은 '대체가 쉬우면 충격을 흡수하여 고용이 덜 줄어든다'고 착각하게 만든다. 그러나 기업의 관점에서 대체가능성이 크다는 것은 비싸진 노동을 다른 생산요소로 더 쉽게 바꿀 수 있다는 뜻이므로 고용감소가 더 커진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임금 상승 뒤 기업이 노동 투입을 얼마나 쉽게 줄일 수 있는지를 판단한다. 조정기간이 길고, 생산요소 간 대체가 쉽고, 노동비용 비중이 크며, 최종생산물 수요가 가격에 민감할수록 노동수요의 임금탄력성은 커진다.

암기 포인트

장기·대체 용이·노동비용 비중 큼·제품수요 탄력적이면 노동수요도 더 탄력적이다.

NoteBase

문 121. 경제활동참가율이 60%이고 실업률이 10%일 때, 고용률은?

① 45%

② 54%

③ 66%

④ 75%

⑤ 83%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경제활동참가율과 실업률을 이용해 생산가능인구 중 취업자의 비율인 고용률을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경제활동참가율 60%, 실업률 10%
구해야 할 값: 고용률
주의할 조건: 실업률의 분모는 경제활동인구이고, 고용률의 분모는 생산가능인구이다.

사용할 공식

고용률=경제활동참가율×(1-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은 생산가능인구 중 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이고, 1-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자의 비율이므로 두 비율을 곱한다.

계산 과정

1. 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자의 비율은 $1 - 0.10 = 0.90$이다.
2. 생산가능인구 중 경제활동인구의 비율 0.60에 이를 곱한다.
$0.60 \times 0.90 = 0.54$
3. 따라서 고용률은 54%이다.

선지 판단

① X — 45%는 계산 결과 54%와 다르다. 틀린 값 45%는 올바르게는 54%이다.
② O — $60\% \times (1 - 10\%) = 54\%$이므로 옳다.
③ X — 66%는 실업률 10%를 경제활동참가율 60%에 잘못 더한 값이다. 올바르게는 실업률만큼 취업자가 줄어들므로 54%이다.
④ X — 75%는 경제활동참가율과 취업자 비율을 곱해 얻는 값이 아니다. 올바르게 계산한 고용률은 54%이다.
⑤ X — 83%는 주어진 두 비율의 정의식으로 도출되지 않는다. 올바르게 계산한 고용률은 54%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실업률 10%를 생산가능인구 전체의 실업자 비율로 오해하면 안 된다.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를 분모로 하므로, 먼저 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자 비율 90%를 구한 뒤 경제활동참가율 60%와 곱한다. 특히 ③의 66%는 두 비율을 단순히 더해서 생기는 오답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생산가능인구를 100명으로 놓으면 경제활동인구는 60명이고, 그중 10%인 6명이 실업자이므로 취업자는 54명이다. 따라서 고용률은 54%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고용률 = 경제활동참가율 × (1 - 실업률)이다.

NoteBase

문 122. 근로자가 자신의 노동시간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임금이 상승했을 때 노동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여가는 정상재이다.)

ㄱ.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크면 노동공급량이 감소한다.
ㄴ. 임금의 상승은 여가의 기회비용을 상대적으로 높인다.
ㄷ. 대체효과는 여가의 소비를 줄이고 노동공급량을 증가시킨다.
ㄹ. 소득효과는 여가의 소비를 늘리고 노동공급량을 감소시킨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임금 상승이 노동공급에 미치는 대체효과와 소득효과의 방향을 구분하고, 두 효과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총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대체효과: 임금이 상승하면 여가 한 시간의 기회비용이 커지므로 여가를 줄이고 노동시간을 늘리려는 효과이다. 노동공급량을 증가시킨다.
소득효과: 임금 상승으로 실질소득이 늘어나면 정상재인 여가를 더 소비하려는 효과이다. 여가가 늘어 노동공급량은 감소한다.
총효과: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크면 노동공급량이 증가하고, 소득효과가 더 크면 노동공급량이 감소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ㄱ만 옳지 않은 설명이다. ㄱ의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크면 노동공급량이 감소한다'가 틀렸다. 올바르게는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크면 노동공급량이 증가한다.

② X
ㄴ은 옳은 설명이므로 옳지 않은 항목으로 고를 수 없다. 임금 상승은 여가 한 시간을 선택할 때 포기하는 임금을 늘리므로 여가의 기회비용을 높인다. 올바른 조합은 ㄴ이 아니라 ㄱ이다.

③ X
ㄱ은 틀렸지만 ㄴ은 옳으므로 'ㄱ, ㄴ'은 옳지 않은 설명만을 고른 조합이 아니다. 올바르게는 ㄴ을 제외하고 ㄱ만 선택한다.

④ X
ㄱ은 틀렸지만 ㄷ과 ㄹ은 모두 옳다. ㄷ의 대체효과는 여가를 줄여 노동공급량을 늘리고, ㄹ의 소득효과는 정상재인 여가를 늘려 노동공급량을 줄인다. 올바르게는 ㄷ과 ㄹ을 제외하고 ㄱ만 선택한다.

⑤ X
ㄴ, ㄷ, ㄹ은 모두 옳은 설명이고, 유일하게 틀린 ㄱ이 빠져 있다. 올바르게는 ㄴ, ㄷ, ㄹ이 아니라 ㄱ만 선택한다.

오답 포인트

ㄱ에서 '대체효과가 더 크다'는 조건을 보고도 노동공급 감소로 연결하는 것이 함정이다. 임금 상승의 대체효과는 노동공급을 늘리고 소득효과는 노동공급을 줄이므로, 더 큰 효과의 방향이 총효과의 방향이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임금 상승 문제에서는 먼저 '대체효과: 여가 감소·노동 증가', '소득효과: 정상재인 여가 증가·노동 감소'로 방향을 나눈다. 그다음 어느 효과가 더 큰지 확인하여 총노동공급의 증감 방향을 결정한다.

암기 포인트

임금 상승 시 대체효과는 노동을 늘리고, 소득효과는 여가를 늘린다.

NoteBase

문 123. A근로자의 연봉이 올해 1,500만원에서 1,650만원으로 150만원 인상되었다. 이 기간에 인플레이션율이 12%일 때, A근로자의 임금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2% 명목임금 증가

② 2% 명목임금 감소

③ 2% 실질임금 증가

④ 2% 실질임금 감소

⑤ 15% 명목임금 증가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명목임금 증가율에서 인플레이션율을 빼 실질임금 증가율을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연봉은 1,500만원에서 1,650만원으로 150만원 증가했고, 인플레이션율은 12%이다.
구해야 할 값: 명목임금 증가율과 실질임금 증가율이다.
주의할 조건: 150만원이라는 증가액을 증가율로 바꿀 때 최초 연봉 1,500만원으로 나눈다.

사용할 공식

명목임금 증가율=임금 증가액최초 임금×100
실질임금 증가율≈명목임금 증가율-인플레이션율
실질임금은 임금의 구매력을 뜻하므로, 물가가 오른 만큼 명목임금 증가분의 실질 가치가 줄어든다.

계산 과정

1. 명목임금 증가율은 $\frac{150}{1,500} \times 100 = 10\%$이다.
2. 근사식에 대입하면 실질임금 증가율은 $10\% - 12\% = -2\%$이다.
3. 따라서 명목임금은 10% 증가했지만 실질임금은 약 2% 감소했다.

정확한 계산으로도 $\frac{1.10}{1.12} - 1 \approx -1.79\%$이므로 약 2% 감소라는 결론은 같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X — ‘2% 명목임금 증가’가 틀렸다. 명목임금 증가율은 150/1,500 = 10%이므로 ‘10% 명목임금 증가’가 맞다.
② X — ‘2% 명목임금 감소’가 틀렸다. 연봉 자체는 1,500만원에서 1,650만원으로 늘었으므로 ‘10% 명목임금 증가’가 맞다.
③ X — ‘2% 실질임금 증가’에서 방향이 틀렸다. 인플레이션율 12%가 명목임금 증가율 10%보다 크므로 ‘약 2% 실질임금 감소’가 맞다.
④ O — 실질임금 증가율은 근사적으로 10% − 12% = −2%이므로 실질임금은 약 2% 감소한다.
⑤ X — ‘15% 명목임금 증가’가 틀렸다. 증가액 150만원을 최초 연봉 1,500만원으로 나누면 10%이므로 ‘10% 명목임금 증가’가 맞다.

오답 포인트

명목임금이 올랐다는 사실만 보고 실질임금도 올랐다고 판단하기 쉽다. 이 문항에서는 물가상승률 12%가 명목임금 증가율 10%보다 크므로 구매력 기준 임금은 감소한다. 또한 증가액 150만원을 숫자만 보고 15%로 오인해서는 안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임금 증가액을 최초 임금으로 나누어 명목임금 증가율을 구한 뒤, 명목임금 증가율에서 인플레이션율을 뺀다. 결과가 음수이면 실질임금 감소, 양수이면 실질임금 증가이다.

암기 포인트

실질 증가율은 근사적으로 명목 증가율에서 물가상승률을 뺀 값이다.

NoteBase

문 124. 효율임금이론(efficiency wage theory)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근로자의 생산성이 임금수준에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에 입각해 임금의 하방 경직성을 설명하고 있다.
ㄴ. 높은 임금은 근로자들의 태만을 막아주는 기능을 함으로써 근로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ㄷ. 기업이 제공하는 임금이 낮아지면 역선택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업은 임금을 낮추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ㄹ. 비자발적 실업이 존재하여도 임금이 하락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효율임금이론이 임금의 하방 경직성과 비자발적 실업을 설명하는 논리, 즉 높은 임금이 생산성 향상·태만 방지·역선택 완화에 기여한다는 점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효율임금은 기업이 근로자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시장균형임금보다 높은 수준으로 지급하는 임금이다.
ㄱ은 옳다. 근로자의 생산성이 임금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업은 임금을 쉽게 낮추지 않는다.
ㄴ은 옳다. 높은 임금은 실직에 따른 손실을 크게 하여 근로자의 태만 유인을 줄이고 도덕적 해이를 완화한다.
ㄷ은 옳다. 임금이 낮아지면 생산성이 높은 근로자가 이탈하고 생산성이 낮은 근로자가 남을 수 있으므로 기업은 역선택을 피하기 위해 임금을 낮추지 않는다.
ㄹ은 옳다. 임금이 균형 수준까지 하락하지 않으므로 노동공급이 노동수요를 초과하는 비자발적 실업이 지속될 수 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ㄱ은 옳지만 ㄴ·ㄷ·ㄹ도 모두 옳으므로 ㄱ만 고른 조합은 불완전하다. 올바르게는 ㄱ, ㄴ, ㄷ, ㄹ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
② X — ㄴ은 옳지만 ㄱ·ㄷ·ㄹ도 모두 옳으므로 ㄴ만 고른 조합은 불완전하다. 올바르게는 ㄱ, ㄴ, ㄷ, ㄹ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
③ X — ㄱ·ㄴ·ㄷ은 옳지만 비자발적 실업과 임금의 하방 경직성을 설명하는 ㄹ도 옳다. 올바르게는 ㄱ, ㄴ, ㄷ, ㄹ이다.
④ X — ㄴ·ㄷ·ㄹ은 옳지만 생산성이 임금수준의 영향을 받는다는 ㄱ도 옳다. 올바르게는 ㄱ, ㄴ, ㄷ, ㄹ이다.
⑤ O — ㄱ·ㄴ·ㄷ·ㄹ이 모두 효율임금이론의 설명에 해당하므로 옳은 조합이다.

오답 포인트

높은 임금이 태만을 줄인다는 ㄴ만 효율임금이론으로 기억하면 다른 경로를 빠뜨리기 쉽다. 이 이론은 생산성 효과뿐 아니라 근로자의 태만 방지, 우수 인력의 이탈을 막는 역선택 완화, 임금의 하방 경직성과 비자발적 실업까지 함께 설명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기업이 임금을 낮추지 않는 이유가 근로자의 생산성 저하, 태만 증가, 우수 인력 이탈과 연결되면 효율임금이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 그 결과 시장에 실업자가 있어도 임금이 내려가지 않아 비자발적 실업이 지속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효율임금은 높은 임금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태만·역선택을 줄이며, 임금 경직성과 비자발적 실업을 낳는다.

NoteBase

문 125. 우리나라의 실업통계에서 실업률이 높아지는 경우는?

① 취업자가 퇴직하여 전업주부가 되는 경우

② 취업을 알아보던 해직자가 구직을 단념하는 경우

③ 직장인이 교통사고를 당해 2주간 휴가 중인 경우

④ 대학생이 군 복무 후 복학한 경우

⑤ 공부만 하던 대학생이 편의점에서 주당 10시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는 경우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경제활동인구의 구성 변화가 실업률의 분자와 분모에 각각 어떤 영향을 주는지 판단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취업자와 실업자는 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되고, 전업주부·구직단념자·재학생 등은 비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된다.
일시적으로 일을 쉬더라도 직장이 유지되는 일시휴직자는 취업자로 분류된다.
주당 10시간의 아르바이트도 수입을 목적으로 일했다면 취업에 해당한다.

사용할 공식

실업률=실업자 수경제활동인구× 100=(U)/(E+U)× 100
여기서 E는 취업자 수, U는 실업자 수이다. 각 선지에서 해당 사람이 취업자·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 중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는지를 확인하면 실업률의 변화를 판단할 수 있다.

판단 과정

취업자가 전업주부가 되면 취업자 수와 경제활동인구가 각각 1명 감소하지만 실업자 수는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실업률은 $\frac{U}{E+U}$에서 $\frac{U}{E+U-1}$로 바뀐다. 분자는 그대로이고 분모만 작아지므로 실업률이 높아진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O — 취업자가 퇴직 후 구직하지 않고 전업주부가 되면 취업자에서 비경제활동인구로 이동한다. 실업자 수는 그대로인데 경제활동인구만 감소하므로 실업률이 높아진다.
② X — 구직을 단념한 해직자는 실업자에서 비경제활동인구로 이동한다. 실업자 수와 경제활동인구가 함께 감소하므로 실업률은 낮아진다. 틀린 판단인 '실업률이 높아진다'는 '실업률이 낮아진다'로 고쳐야 한다.
③ X — 교통사고로 2주간 휴가 중이어도 직장이 유지되는 일시휴직자는 취업자로 분류된다. 노동력 상태가 바뀌지 않아 실업률도 변하지 않는다. 틀린 판단인 '실업률이 높아진다'는 '실업률이 변하지 않는다'로 고쳐야 한다.
④ X — 군 복무를 마치고 대학에 복학한 사람은 재학생으로서 비경제활동인구에 해당한다. 이 경우 경제활동인구와 실업자 수가 변하지 않아 실업률도 변하지 않는다. 틀린 판단인 '실업률이 높아진다'는 '실업률이 변하지 않는다'로 고쳐야 한다.
⑤ X — 공부만 하던 대학생이 주당 10시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면 비경제활동인구에서 취업자로 이동한다. 실업자 수는 그대로이고 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하므로 실업률은 낮아진다. 틀린 판단인 '실업률이 높아진다'는 '실업률이 낮아진다'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②처럼 실업자가 구직을 단념하면 고용 사정이 좋아진 것이 아니어도 통계상 실업률은 낮아질 수 있다. 또한 ③의 일시휴직자와 ⑤의 단시간 근로자를 실업자나 비경제활동인구로 오인하면 틀리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각 사람을 취업자·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한 뒤 이동 전후의 U와 $E+U$를 각각 비교한다. 분자가 그대로인데 분모가 줄면 실업률은 상승하고, 실업자가 비경제활동인구로 빠지거나 취업자가 새로 유입되면 실업률은 하락한다.

암기 포인트

실업률은 '실업자 ÷ 경제활동인구'이다. 취업자의 노동시장 이탈은 분모만 줄여 실업률을 높이고, 구직단념자의 이탈은 분자와 분모를 함께 줄여 실업률을 낮춘다.

NoteBase